

理事會 構成과 機能의 실상과 문제점

朴 榮 根

(中央大 佛語佛文學科)

1. 彈壓과 墮落의 現住所

우리 교육에 또다시 탄압과 타락의 회오리가 드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6공화국은 民族·民主·人間化 교육을 외친 1,527명의 교사를 해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부정비리를 규탄하고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한 100여 명의 교사와 54명의 교수를 재단과 함께 짜고 강단에서 내몰았다. 5共시절에는 해직된 교수가 9명이었는데, 6共에서는 '91년 7월 31일 현재 56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 8월 31일 稅務大學은 이원희 교수(민법)를 학교 안팎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제도를 악용해서 탈락시켰다. 한편, 全州大는 지난 3월 대학원 입시 부정 사건에 관련된 차용준 교수를 파면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구명운동을 벌인 같은 학과 오세홍 교수와 원한시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최규홍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학내 분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수원의 매탄국민학교와 충남 테안의 서남중학교에서 時局宣讀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방임 아래 여선생을 포함한 교사들을 폭행한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이 최근에 자행된 교육탄압의 첫 신호였다. 이 신호에 맞추어 지난 22일 헌법재

판소는 논리적 설득력과 진실을 지닌 소수 의견을 무시한 채 노조설립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해 合憲결정을 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자신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압 분위기를 한번에 이용하려는 듯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5일 학무국장 회의에서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타살사건으로 생긴 지난 5~6월의 사태에 대해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중 93명을 무작스레 징계키로 하였다. 게다가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대학교수의 목을 옥죄고 있다. 교수의 敎權이 종전에는 법률로 보호되었으나, 앞으로는 行政命令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정년교원정원제와 교수제임용제라는 이중의 장치로 정부와 재단의 눈에 거슬리는 교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 '87년 대학 자율화 과정중 학칙에서 사라졌던 학사경고 및 학사재적제를 되살리기 위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속셈이 깔린 이런 움직임은 지난 6월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 이후 교육부가 학원안정 대책의 하나로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강력히 권고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학의 권위를 뿌리부터 끊는 構造的인 부정·비리 症候群이 계속 대학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능계의 이른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파렴치한 부정입시 및 교수와 악기상이 짜고 한 가짜 악기 판매사건, 그리고 교육제정의 열악성을 내세워 교수·직원 심지어 총장과 이사장이 합세하여 저지른 엄청난 입시부정이 대학을 타락·오염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84년 이후 현 교육부가 전국 20여 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1천 5백 여 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중에서도 상지대 134명, 경기대 200여 명, 전주우석대 223명, 경산대 61명, 동국대 45명, 인하대 43명, 고려대 21명, 한성대 56명의 부정입학 숫자와 엄청난 금액 그리고 방법의 교활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어안이 병병했다. 특히 교수 수가 200명 미만이고 교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재단의 장악이 손쉬운 群小大學에서 입시부정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대학의 가장 신성한 학사행정 중의 하나인 入試에서 이처럼 부정이 심한 것을 미루어 보면, 대학사회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밀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病的일 정도로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전쟁'이라는 한국적 특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입시부정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犯法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건국대사건은 그 규모와 지능적인 방법에 있어서 충격적이다. '89년부터 4년에 걸쳐 1백 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35억을 받고 부정입학시켰다는 수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시부정이 폭로된 직접적인 계기는 재단과 총장 그리고 이들 주위의 일부 몰지각한 교수와 직원의 利權을 둘러싼 교내 파벌싸움에서였다. 심지어 이 학교의 젊은 이사장인 유승윤씨는 동래실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부동산을 사들여 골포장 사업에 눈독을 들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도서관 건립을 명분으로 거두어 들인 '검은 돈'의 일부는 기밀비·판공비로 탈바꿈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도처에 흘러갔으리라 쉽게 짐작된다. 물론 교육제정의 열악성이 입시부정의 주요한 원

인이지만, 이른바 '생지옥'이라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재단의 도덕성 회복, 교육의 公概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부정입학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과 감사, 사학 재정난에 대한 국고의 과감한 지원, 입시부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부정입학 학생과 학부모 명단의 공개 및 처벌이 일벌백계식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공정한 경쟁대열에 선 善意의 학생과 돈 없는 학부모 당사자가 될 것이다.

2. 私立學校法の 反民主性

특히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점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학내에서는 재단의 痼疾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76%의 대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私學에 대해 財政支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 3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수제임용제를 해마다 적용할 수 있고, 둘째로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재단으로 넘기며, 셋째로 이사장 가족의 총·학장 취임을 가능하게 하고, 넷째로 친척의 이사 취임 비율을 40%로 늘리며, 다섯째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타교 겸직을 허용하고, 여섯째로 재산 임대와 문교부 허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 여러 교육단체들은 이미 敎育關係法을 민주적으로 고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88년 하반기부터 전국교사협의회, 건국국립대학 교수협의회 의장단,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민주교육단체들은 교육관계법을 고치기 위해 대중집회,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85개 대학 4,478명의 교수들은 '89년 5월 17일 "교육악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 노도와 같은 항의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법인의 줄기찬 물밑 대화와 거래에 의해 與·野 문공위원들은(야당 의원이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교육법은 심의조차 않고 하위법인 사립

학교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 없이’ ‘비공개리
에’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타협에 의해 겹새
게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미 '88년 7월 한국대
학 법인협회가 이 법의 시안을 만들어 막후 로
비를 끈질기게 벌여 왔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
졌다.

大學과 社會民主化를 위해 애쓰는 교수들을 탄
압하려는 정권과 재단의 底意가 보이는 사립학
교법의 칼바람이 이처럼 교육계를 할퀴고 있다.
많은 재단은 대학을 私企業으로 여기고 특별제
를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고, 낙하산식 교직원
인사로 감시망을 만들어 대학 구성원 간의 불신을
증폭시켜 왔던 교육계의 ‘검은 손’이다.

지난 해 11월 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백 여
명의 대학법인 이사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법인
협의회(회장 유상근 명지대 이사장) 정기총회에서
유상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의대 이사장은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을
꼭 잡고 있는 대단한 본인입니다……덕성여대 이
사장은 서울출신 의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침 저녁으로 뛰어들었습니다……충신대학 이사
장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
다……한양대 이사는 평민당의 지역인 광주·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을 설득시킨 공이 있습니
다……광주대 이사장은 국회 내부에서 사립학교
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
다.”

교육계의 대부이자 큰 손인 유희장은 자신들
의 ‘영역주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私立學校
法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은 각 대
학 이사장의 혁혁한 전과(?)를 치하하고 감사
패를 주었다. 이어서 유희장은 이사장들의 저
인망 로비 활동 덕택으로 299명의 이른바 선
량 중에서 반대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묵은 낙지떼’ 낚았다는 어회고(?)를 자랑했
다. 21%의 세비인상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달마다 516만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쟁
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
학법인의 엄청난 ‘당근 공세’에 무릎을 꿇었다.
왜 정부는 이와 같은 ‘검은 거래’를 조사하지 않
는가? 집단이기적이고 부도덕하게 야합한 두 집
단은 대학 구성원의 敎授權·學生權·行政權을

몰주머니로 만들었다. 대학 구성원의 권익은 아
랑곳하지 않고 총·학장을 허수아비로 만듦으
로써 재단의 권한과 이익만을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철시킨 이 단체의 우두머리는 “우
리 사학재단들이 합심하여 국회의원을 설득시키
면 사립대의 재정과 관련된 조세제도 개정법안
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청을 불인 후,
재단재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면세특혜를 얻
어내기 위해 합심하자고 나팔을 불었다. 게다가
이 단체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고쳐서 현법이 보
장한 직원의 노동 3권을 몰수하려는 음모를 꾀했
다. 이 협의회는 해방 이후 많은 保守利益團體
가 늘 해온 것처럼 합리적 비판세력을 용공·좌
경으로 몰아부쳐 자신들의 既得權을 관철시키는
데 항상 이용해 왔던, 약효가 확실한 무기인 ‘레
드 콤플렉스’를 이 청원서에서도 잊지 않고 처
방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 직원노동조합은 공
산주의 사회에서 시행하는, 능력과 직급을 무시
한 단일호봉 보수제 실시를 폭력시위로 요구하
고 있다”며 “일부 좌경학생과 비밀연계하여 상
호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교육행정 관리와 학
교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역지와
양탈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못생긴 색시 달밤에 샷갓 쓰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違憲 요소마저 있음에도 무
엇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대학법인에게 교
수와 직원의 임면권 및 제청권을 부여하고,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이사장과 그의 친·인척에게 총·
학장 취임을 용인하는가? 교육부는 왜 재단의
이와 같은 전횡을 지도·감독하기는 커녕 감싸
고 밀어주는가? 더군다나 최근 몇몇 사립대학에
서는 대학 운영의 반민주성·비도덕성 때문에
물러났던 학교 설립자들이 자율화와 민주화의 물
결을 빙자해서 다시 총장의 권력에 올라앉아 교
주 노릇을 하면서 ‘영역주권’의 나팔을 불어 학
원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3. 大學法人의 超法的 行態

심지어 사학재단은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
지 않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희한한
사건마저 발생했다.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재단

(이사장 신광남)은 지난 '87년 죽벌체제와 재단 비리의 시정을 요구한 이기남·류기홍 교사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지난 6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86년 12월 31일 재단 비리와 학교운영 개선을 요구한 22명의 교사가 운테 17명을 의원면직, 강제사직, 해임, 파면 등의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교단에서 쫓아낸 신 이사장과 그녀의 남편인 설립자 나용목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법은 법도 아니고 판사들도 다 썩었다”고 강변했다. 복직조치를 3개월이나 미루어 오던 재단측은 지난 9월 12일 교사들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재단측은 복직된 지 3일만인 지난 15일 개정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을 ‘최초로’ 적용해서 이들을 직위해제시키고 정적을 요구하는 징계의결서를 본인에게 보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量定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났을 때에는 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건 대낮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질서를 농락하는 이 재단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교권을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동의대 이사장이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반대한 장희창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이 학교의 입시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김창호, 박동혁 교수가 해임무효 확인소송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신청해서 '90년 10월 모두 승소했음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깔아뭉개고 이 두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의 심각성에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 동의대 사태를 취급한 MBC의 ‘PD수첩’에서 김임식 이사장은 이 땅의 교육을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아래와 같이 본바탕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학교는 내가 만들었다.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의견이고 나는 나대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두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내가 이 학교의

‘主人’인 이상 결코 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동의재단은 두 교수의 복직은 커녕 지난 8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두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두번씩이나 죽이는 만행을 자행했다. 교육부는 이런 악랄한 일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86년 2월 재단쪽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측에 의해 면직됐던 김선형 교수가 학교재단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무효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서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최근 안기부 간부출신을 교수로 임용해 말썽을 빚은 선인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에서 면직된 교수를 임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4. 大學法人의 暴力使嗾

또한 재단의 부추김에 따른 폭력이 학원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10일 새벽 1시 10분쯤 비판적 교수들에게 교권탄압이라는 ‘용단폭격’을 퍼붓고 이사장이 학장을 골프채로 때려서 유명해진 광주 호남대 본관 앞 잔디밭에서 이 곳에 세워둔 이 학교 출신인 표정두씨('87년 학생시위 때 사망) 추모비 재단을 철거하려던 이 학교 학생과장 등 교직원과 체육특기학생 50여 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 학교 학생 70여 명과 충돌했다. 또 이날 오전 9시 40분쯤에는 이 학교 체육과 학생 7명이 이 사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마구 들어가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 안에 있던 학생을 집단폭행해서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한편, 이 학교 총학생회는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재단쪽이 교직원과 권투부 학생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학생회를 억누르려는 움직임이라며, 재단쪽의 이와 같은 탄압에 맞서 추모비 건립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단쪽이 권투부 사범과 트레이너를 학생과의 직원으로 뽑고,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한 권투부 학생 10여 명을 敎校隊로 활용해서 총학생회실 난입과 폭행을 사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광주지검 공안부는 11일 광주 호남대

교내 추모비 건립을 둘러싼 교직원과 학생 집단 충돌사건에 관련해서 학교쪽과 총학생회쪽을 불문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관련자 모두를 검거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학생들의 추모비 건립 강행은 학교쪽의 재산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속초 동우전문대학에서도 일어났다. 자유총연맹 이사장인 정일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교 안에서 재단의 부추김을 받은 학생과 직원들과 학생들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었다. 거기에 항의해서 지난 3월 20일 이 학교 동아리 연합회장인 정연석군이 “학원자유화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했다. 이밖에도 일부 문제 사립대학에서는 교수와 직원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우석대에서는 학생치장의 목인 아래 학생과 직원들이 도피 중인 학생회 간부들의 소재를 대라며 두 학생을 무차별 구타해서 탈생을 빚고 있다. 과거 '60~'70 년대에 사학재단들이 학내 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상투적으로 이용했던 방법, 즉 재단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교수·직원·학생들의 폭력이 아직도 학원에서 공공연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5. 大學法人的 族閥體制

특히 대학법인은 전근대적인 족벌체제를 만들어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사립대학의 경우,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채워져야 할 이사회는 비전문적이고 족벌체제적인 형태를 띠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오랫동안 학내 분규로 탈색이 되어 왔던 조선대, 수원대, 세종대, 인천대 등 많은 사립대학은 족벌재단과 재단의 횡포가 큰 불씨로 작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교수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커녕 ‘침묵의 우물탕’에 안주했다. 특히, 재단의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학사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

구한 김경식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단법인 동아재단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동아학원은 산하에 대전중경공업전문대학, 대전상업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대전동중학교, 동아유치원, 대전실업전문대학을 소유한 거대한 사학재벌이다. 동아재단의 족벌체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김노원(동아재단 설립자, 김정우의 부친)
- 김정우(동아재단 이사장)
- 박종순(대전실전 학장, 동아재단 이사, 이사장 조카 사위)
- 김성경(대전실전 부학장, 행정과 부교수, 동아재단 사무국장, 이사장 아들)
- 김충경(동아연원 사장, 동아재단 이사, 유령 교수, 이사장 아들)
- 김광경(삼광택서 대표이사, 의상과 조교수, 이사장 딸)
- 김요경(행정과 부교수, 재단기획실장, 이사장 조카)
- 김성규(서무과 직원, 이사장 조카)
- 박경희(동아유치원장, 이사장 며느리)
- 한영자(유령 직원, 이사장집 가정부)

한편, 세종대의 경우를 보면 과연 이 땅의 대학법인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이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某교수는 이사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某학장은 학생들이 이사장님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는데도 적극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총학생회는 '88년 세종대 학생들이 족벌재단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는 농성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사장의 친척인 아무개 여교수가 이사장의 아들인 기획실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은 사학재단의 족벌체제가 지닌 치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학의 공공성·자주성·특수성을 유린하고 교육을 상품화시켜 온 대양재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는 사학재단의 전형일 뿐이다. 더군다나 주영하 세종대 이사장의 아내이자 실세인 최옥자 전 명예총장이 '80년 8월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두환위원장님의 애국애족의 놀라운 슬기와 용기, 영단이 오늘

평화와 경제회복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극찬하고, 당시 5·18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위원장님의 신속하신 영단으로 전장군 사퇴 요구 등 엄청난 탈선·소란행위와 폭동을 저지했다"고 외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저질 코메디는 학내민주화 세력과 관련된 언급에서 절정에 이른다. "문교부의 감사로 이들은 개가와 환호를 울리며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며 "전위원장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세종대가 사회적으로 불의의 불의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주영하씨와 최옥자씨의 장남인 주영근씨가 교육관계법의 소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교수로 부임(1978년 당시 31세)하면서 인사, 학사, 제무 등 갖가지 분야에서 비민주적 인사행정과 비합리적 학사행정을 통해 학원을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1980년 세종대에 잠시 존재했던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반재단 교수들로 몰아부쳐 75명 중 50명을 강단에서 쫓아낸 장본인이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학재단은 즉별체제만이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교무한 인사들과 친·인척 그리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철용성을 쌓아왔다. 지난 해 성낙돈 교수를 일방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덕성여대 이사진의 명단을 살펴 보면 사학재단의 위상과 문제점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원영(박원국 이사장의 동생), 서명원(전 문교부장관, 현 세종대 이사), 조영식(경희대 총장), 김희집(고려대 총장), 박동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자(덕성여대 동문회장, 청량리 정신병원장 부인), 이태영씨 등 이른바 교육계의 대부들과 교육철학이 없는 자들이다.

6. 私學財政難과 國庫支授의 不在

이제 사립대가 직면해 있는 재정난과 국고의 재정지원을 살펴 보면, 우리 교육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다 원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외국과 한국의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 또는 정부운영 대학이다. 미국에서는 주립에

는 78%, 사립에는 2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정부지원이 '70~'88년 기간중 14~30%, 대만에서는 약 1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국·공립의 국고지원이 52.8%인 반면('88년 기준) 사립대의 경우는 1%인 160억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게다가 GNP의 3%가 우리나라 교육예산인 데 반해 다른 선진국은 4.5~6.7%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절대 규모가 빈약한 실정이다. 또 일본과 대만에서는 사립대학의 시설, 실험기자재 구입비용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며, 일본에서는 사립대 교수봉급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매년 약 150명의 교수를 정부가 채용하여 사립대에 배치하고 이들의 봉급을 대신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립대학 교육비 수입내용을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는 지나친 교육열에 비해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국가별 사립대학 교육비 수입내역(%)

구분	정부지원	학생 등록금	학교법인인	기부금	용역	기타
서독	100					
프랑스	90.2	3.6		5.1		1.1
영국	60.1	13.0	16.9	1.0		9.0
미국	18.4	38.7	14.7	14.7	23.7	4.5
일본	22.5	60.3	8.6	8.6		
한국	1.1	79.1	15.5	1.1		3.2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개정의 국제 비교 연구」 1988.

엄청나게 확대된 교육수요와 팽창(해방 당시 7,819명이었던 고등교육 인구가 현재 160만 명에 달해 200배 이상의 양적 폭발을 가져왔다. 한국 대학은 인구 면에서 세계 2위의 수준에도 달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을 따라잡지 못한 교육재정의 문제, 그중에서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학을 동원함으로써 구조적 모순이 점점이 쌓인 사학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교

육부의 '거품교육정책'이 남긴 결과이다.

게다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경비의 10 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수익금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과연 사립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이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90년도 전국 사립대학교 재단전입금 현황과 각 대학교 예산 중의 비율」이란 자료에 따르면, 사립 51개 종합대의 총 운영비 수입 중 재단전입금은 14.5%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립 32개 단과대학의 총 운영수입 중 재단전입금은 2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한마디로 속빈 강정의 재정지원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88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80개 사립대 가운데 27개 대학의 재단전입금이

학교재정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숙명여대, 경성대, 홍익대 등 3개교는 학교운영에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육부는 학교의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국제대의 울산대('89년) 그리고 전주대와 상지대('90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는가?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계 27개국 60개 대학의 교육여건을 국민소득, 학생 수, 국·사립 유형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여 국제비교한 결과를 보면, 재단전입금과 국고지원이 부실함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열악함을 <표 3>, <그림 1>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실상가상으로 역대 정권은 지배계급의 계급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하는 기제로서 교육을 지배계급의 지배를 보장하는 도구로 전략시켜 왔다. 한수 더 떠서 교육부는 그것에 발맞춤

<표 2> 전국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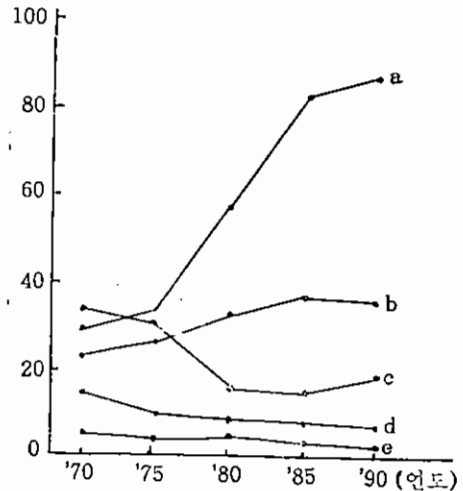
구 분	전 입 금 (a)	운영수입 (b)	전입비율 (%) (a/b)	구 분	전 입 금 (a)	운영수입 (b)	전입비율 (%) (a/b)
한림대	9,623,500	14,914,814	64.5	동국대	1,886,000	30,678,588	6.1
인제대	10,824,747	16,937,831	63.9	대전대	420,000	7,025,968	6.0
아주대	11,739,699	26,602,981	44.1	국민대	800,000	14,591,946	5.5
고려대	30,263,512	75,147,158	40.3	숭실대	776,796	14,808,729	5.2
계명대	19,201,870	47,673,132	40.3	동덕여대	319,732	6,790,482	4.7
순천향대	3,040,704	12,242,413	24.3	조선대	1,787,235	38,360,775	4.7
연세대	16,234,762	72,987,219	22.3	한국외대	1,200,000	25,902,444	4.6
홍익대	4,590,000	24,808,739	18.5	관동대	450,000	10,274,845	4.4
영남대	8,271,036	46,398,965	17.8	성신여대	370,100	12,136,573	3.0
중앙대	7,365,041	43,536,675	16.9	인하대	915,297	30,679,109	3.0
한양대	8,370,073	57,502,590	14.6	세종대	200,002	8,232,970	2.4
단국대	5,128,424	35,560,260	14.4	한남대	300,000	15,032,803	2.0
진국대	5,000,000	39,166,800	12.8	성균관대	571,500	29,614,965	1.9
경성대	2,091,584	16,674,743	12.5	서강대	250,602	15,769,664	1.6
경원대	1,454,154	12,147,406	12.0	상명여대	152,255	10,214,912	1.5
명지대	2,100,000	18,401,145	11.4	동의대	198,000	14,005,236	1.4
광운대	1,000,000	9,232,504	10.8	덕성여대	100,000	8,325,347	1.2
인광대	3,692,201	34,600,982	10.7	이화여대	465,100	38,975,751	1.2
인천대	1,000,000	11,480,000	9.6	대구대	151,020	23,386,220	0.6
경기대	1,500,000	17,210,640	8.7	호서대	30,300	6,759,224	0.4
경희대	3,437,176	40,208,013	8.5	청주대	21,000	17,085,360	0.1
서울여대	527,553	6,795,423	7.8	효성여대	10,040	10,138,408	0.1
수원대	800,000	11,087,358	7.2	숙명여대	13,000	13,950,429	0.1
경남대	1,700,000	24,405,748	7.0	상지대	3	7,570,208	0.0
동아대	2,210,000	34,972,121	6.3	전주대	0	11,621,897	0.0

〈표 3〉 세계 대학별 교육여건 비교

구분	대학명	교수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장서수	교육비생부담비 (%)
미국	미네소타	16	199	10
	일리노이	12	207	8.7
	미시간	14	181	14.8
스위스	포르노그	13	274	16
노르웨이	베르겐	7	1062	0
캐나다	앨버타	14	95	12.1
	브리티시	13	109	15.1
	컬럼비아	13	190	12
스웨덴	고텐부르크	12	—	0
	룬네	9	11944	0
	우메아	4	68	0
일본	히로시마	8	155	12.7
	교토	6	281	69.3
	메이세이	37	36	—
덴마크	알보르그	8	87	0
	아오루스	—	152	—
	오덴세	16	113	0
호주	트라이드	15	91	—
	뉴캐슬	15	72	0
	웨스턴	13	217	0
오스트리아	요케	—	—	—
	하비르	—	—	—
	클레르	—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7	74	15.5
	테르펜	11	137	7.1
	부르크	14	111	14
영국	옥스퍼드	10	368	12.3
	케임브리지	10	184	22
	맨체스터	10	—	13
싱가포르	리닝	—	25	15.4
홍콩	차이니스	10	135	6.5
	콩그	10	118	5.6
스페인	아우토노마	—	—	—
	바르셀로나	16	12	19.1
대만	칭청	7	129	—
	크리스티아	19	19	76
말레이시아	페타링	11	28	5.3
	말라카	—	117	5.6
	말라카	—	53	8.9
남동아시아	방콕	—	—	5.1
	워터	—	—	20
	워터	—	—	—
브라질	카시아스	27	118	56
	브라질리아	9	50	0
태국	차앙	7	17	9.1
	싱	10	42	6.7
	스리	9	76	7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30	1	50.3

핀란드	비발리	25	2	6.5
	리핀	52	1	35.5
인도네시아	잠비	19	9	28
	인도네시아	33	4	96
수단	카르툼	12	55	9.4
칠레	콘셉시온	12	29	30.2
한국	부산대	26	22	48.3
	한양대	26	24	80
	연세대	23	30	53.6
	서울대	38	32	66.9
	건국대	31	24	76.9
포르투갈	우스보아	—	28	80

〈그림 1〉 한국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 a: 강의실당 학생 수
- b: 교수 1인당 학생 수
- c: 학생 1인당 장서 수
- d: 학생 1인당 건물면적 (m²)
- e: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이 자료는 교육부의 「문교통계연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130만 원, 미국 835만 원, 일본 629만 원, 서독 502만 원이다.

을 함으로써 사학의 교육여건은 악화일로로 걸어왔다. 교육부는 '81년 졸업정원제라는 한치 앞을 못보는 정책으로 사학제정난을 가중시켰다.

학생 수가 무려 30%씩이나 증가함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에 사학은 정부의 지원없이 자기능력을 뛰어넘는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부채를 지니게 되었고, 교수 확보의 절대부족과 교육시설의 미비는 질적 저하를 가져왔

며, 학생은 바로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당사자다. 얽힌 데 뉘친 격으로 각 대학의 분교 설립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학의 재정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講義는 있으나 敎育이 없다”는 지적은 분교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고 교육세를 전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학재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목적제로 거두고 있는 교육세 가운데 '88년 42%, '89년 52%, '90년 64%가 교육 이외의 부문으로 전용되었다. 특히 '90년 64%의 금액은 1,700억에 이르고 교육세 대비 사립대학 지원비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로 이런 사실에서 현 정권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뒤떨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80년~'88년까지 16개 사립대학을 설립 인가해 주었는데, 법적 기준을 갖춘 대학은 겨우 5개 대학에 불과하였다.

7. '빚비교육' 정책——

學校債・編入學制・寄附金入學制

이처럼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정부는 이런 열악한 현실을 과감히 고쳐 나가는 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미봉책으로 학교채 발행과 '89년에 부활한 편입학제도를 사립대학에 허가해 주었다. 한국대학법인협회가 입안한 학교채의 발행은 모집대상을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모와 동문으로 제한하고 무이자율 원칙으로 액면 가격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채권의 상환기간을 학생의 졸업 또는 제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상환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자동소멸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채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휴학·자퇴 및 군입대로 생기는 결손인원에서 비롯한 사립대의 재정난을 완화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대 졸업생에게 4년제 대학의 배움의 길을 터준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편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학생의 양적 팽창과 질 낮은 대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현상을 아울러 야기시켰다. 또한 편입학제도는 전문대생들이 일반 대학에 물리는 현상을 일으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 고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4년제 대학으로 가는 중간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교육부는 대학법인과 한통속으로 “울고싶자 때린다”는 식으로 건국대 부정입시를 내세워 '85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기부금입학제’를 슬그머니 다시 내놓고 있어 부정입학과 사학 재정난이 별도의 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정난을 내세워 사학이 저지른 부정입시의 불가피성을 오히려 두둔하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92년부터 정원의 3% 내에서 기부금입학제 시행을 유형설 교육부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경해진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 이 제도를 주장하는 측은 기부금입학제가 아니라 기여금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돈을 받고 교원을 채용하더니 이제 돈 받고 학생을 입학시키려는가? 이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기여금제도의 실시를 다시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입학에서의 ‘기여’의 개념에는 물질적·재정적 기여 이외에 비물질적·정신적 기여도 포함시킨다.

둘째, 이 제도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정원의 2%로 한다.

셋째,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은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엄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넷째, 이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학생선발의 과정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마련되는 재원은 장학금,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의 강화 등에 쓰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어느 대학 교무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제도의 양두구육적·건강부회적인 어거지와 속내를 벗

바람에 읽을 수 있다. “기여 입학금이 내는 재원으로 수만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는다면, 이것은 이러한 학생들 개인의 희망이며, 민주국가의 희망이며, 거시적 의미의 社會正義라고까지 말한다면 그릇된 생각일까?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富의 공평분배,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 너스레가 지닌 자유주의와 보편주의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교육을 무시한 허구와 위선에 가득차고 ‘제논 물대기’ 식의 어휘 구사로 사회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기부금 입학제 허용을 반대함에도 사학 재정난의 장본인인 정부와 재단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외면·방기하면서도 배짱이들의 일하지 않고 앉아서 거두어들인 ‘냄새나는 돈’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입시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이름아래 돈 있는 자들을 위해 아파트의 경우처럼 ‘채권입찰제’로 하겠다는 것인가? 금권정치에서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교육기회의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금권교육’으로 넘어가자는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시를 담보로 한 거래는 결코 없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8조 6천억 원의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9조 4천억 원의 私敎育費(’90년도 기준)의 흐름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을 소홀히하여 음성적 입시를 양성화하고 입학에 돈을 맞바꾸려는 교육부와 대학법인의 짧은 의도는 국민의 정서와 닿지 않는다. 가령 우리 교육의 ‘맥도 모르고 칩통을 흔드는’ 식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서울에 있는 세칭 일류대학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또한 인기있는 단과대학과 학과에 몰릴 것은 뻔한 이치이다. ‘뗏 짐차리’ 대학에서 앞으로는 ‘얼마차리’ 대학으로 대학의 등급화가 돈의 액수로 매겨진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제도에 의해 ‘뒤틀문’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학적능력이 문제될 것이고, ‘앞문’으로 입학한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은 반드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기부금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의 사후 관리 과정에서 재단과 학교당국은 교수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체육특기자의 학점 처리에서 보듯이 교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현 실정에서 기부입학은 기부 학점과 기부졸업이라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입시를 낚아올린 학부모들의 염치없는 극성과 거기에 빌붙은 재단은 학점과 졸업마저도 商品化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따라서 학원은 황금만능주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주장하는 전국교무처장협의회와 총·학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법인협회의 원적조종을 받아 수학능력이 있고 학교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정원의 1~2% 내에서 학생을 뽑으면 될 것이고, 더구나 외국에서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청을 불입으로써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당해 대학에 시험을 보고 불합격된 학생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수학능력이 있으면 굳이 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입학하려 하는가? 수도권 인구 억제책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철저히 늘려왔던 교육부가 기부금입학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조치이다. 우리의 주장은 2%에 해당되는 4천 명의 학생들에게 기부입학이 아닌 공정한 입시경쟁에 의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의 학생들이 지불할 금액을 계산해 보자. 사립대는 전국에 91개이고 59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 넉넉히 계산을 하더라도 한 학교당 정원의 학생 수는 20~40명이고 이들로부터 1억씩을 받으면 1,800~3,600억 원이 된다. 이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돈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국민의 열렬한 교육열에 비해 교육 여건이 최고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지난 해 세수초과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바로 이 열악한 조건 때문에 사학재정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재단의 전입금 확충과 교육제정의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수 년 동안 등록금 인상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機能主義的 사고방식을 외국의 경우를 제시하는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관행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의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우리의 고유한 조건과 풍토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에서 그것도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좋다는 수직적이고 외국 것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에 있으며, 제도의 형식만을 차용 내지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전통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더더욱 우리가 우러하는 점은 이 제도의 파급효과에 있다. 교육을 철저히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상품은 필경 高價品이 될 것이다. 대중화가 된, 즉 증거가 품목이 된 기존의 학교교육 내용과 시설에 불만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일부 부유층과 소일거리를 찾는 이른바 일부 명망있는 사회원로들 그리고 부의 사회적 환원 압력을 받고 있는 재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만의 특수학교를 생각할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격을 통해 교육부문이 개방되어 외국학교와 학원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우리 교육계는 이와 같은 현상에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고급 중산층에서 볼 수 있는 외국 문물을 좋아하는 경향은 교육의 귀족화·고급화를 불러 일으켜서 국민 사이에 이질감의 골을 깊게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94년 각 대학마다 본고사가 다시 실시될 경우 우리의 걱정은 더욱 깊어진다. 현 시점에서 대학의 여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시를 공정히 관리할 장치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입시의 원천적 부정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방임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른 재단권한의 강화로 입시부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기부금입학제도는 많은 대학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아 학원 분류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미 학력고사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에게 한 건당 일정한 연구비와 포상을 주듯이 재단은 '학교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수와 직원을 기부금 입학생을 끌어 모으는 데 동원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지구상 어느 구석에도 돈으로 입학을 사고 파는 反교육적 '검은 거래'를 하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은 社會的 還元性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처럼 교육에 대한 공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재단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매몰되어 등록금 인상이나 기부금입학제를 통해 사학 제정난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태도는 철저히 불식되어야 한다. 제발 학원을 '포커판'으로 만들지 말라! 총체적 부패 구조 아래에서 아직은 덜 오염된 학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양극화된 빈부격차를 과감히 줄이고 대학이 신뢰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학교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름'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학재단은 기업과 사회가 기부금을 싯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학교법인의 폐쇄성, 즉 비공개성과 '60~'70년대에 사립대학이 학교시설에 비해 학생들을 엄청나게 뽑아서 그 등록금을 다른 목적에 전용했고 이른바 제정난을 매꾸기 위해서 자주 부정입시를 해왔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사립대학은 경쟁적으로 그들의 교세를 뽑내기 위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체육특기자의 선발과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뿌리고 있다. 체육특기자들에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스카우트 금액과 300점 이상 고득점자에게 4년간 등록금 면제 및 메달 용돈의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주고 있는 반교육적 행태는 제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 대부분의 경비는 보통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불된다. 이러한 사실

이 사학의 불신풜조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어느 교수의 지적처럼 “사학재단의 95% 이상이 8·15 이후, '63년 전후, '7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배경에는 토지개혁에서 면제된 토지의 학교재단화를 유도한 이래 갖가지 정부의 특혜조치가 있었다.” 따라서 사학재단 가운데 땅 재벌이 의외로 많으며 어느 대학의 이사장 부인은 제주도에서 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재단은 대학의 외형적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물밑 거래로 해결을 해왔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이 되었지 교육재정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찾는 데 소홀히하는 등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갯밭에만 마음이 있었다.

8. 問題點에 대한 代案

이제 재단은 교육부와의 共生關係를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관료의 경직성과 오만함 그리고 교육부의 시혜적이고 뻔질신인 ‘넌비교육’ 정책은 앞으로 펼쳐 버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냉전 증식의 흐름에 따라 군사비를 줄여 열악한 사학재정에 국고를 지원해서, 그것도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재정과 대학 자율화의 혈로를 더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와 대학법인은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즉각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법인은 입시부정을 빌미로 대학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기부금입학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헌법에 보장되

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교육주체로서, 법인은 교육관계법에서 규정된 경영주체로서 결합되어야 한다. 법인은 사학의 공공성·자주성·특수성을 존중하고 敎育의 公概念이라는 교육철학을 견지해서 대학을 뒷받침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교육을 내세워 富를 축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측근 인사의 폐쇄성과 비전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7~1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양식있는 교육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며 재정확보와 경영의 전문성·효율성·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직원 인사의 공채와 더불어 대학재정에 대한 공식기관의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에게 인사권·재정권·학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적 전환, 즉 構造的 조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백화점식’으로서 특성없이 운영되고, 교육시설의 영세함과 교육내용의 부실이 극심하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첨단 과학교육이나 공과대학 육성은 국립이 담당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예·체능 계통은 사학 내지는 유럽의 경우처럼 전문학교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실대학을 과감히 정리해서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의 교육이 ‘넌비’교육이 아니라 ‘가마솥’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